

# 몸부림치는 中共

## 오늘의 經濟 그 問題點은 ?



〈前月號에서 계속〉

### 「萬元戶」의 財產浸收가 시작되는 날

현재 鄧小平그들은 「농업의 자유화」정책을 전환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도 그 한계는 매우 좁다. 즉 농촌에서 「萬元戶」의 집중현상이 일어났을 때, 재차 「농지개혁」에 가까운 정책이 혹은 필요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戶당 고작 3反전후로 한정된 농지를 둘러싸고 소수의 「萬元戶」들과 압도적으로 많은 빈농과의 대립이 격화했을 때 과연 현재의 「농업의 자유화」정책이 그대로 지속될 것인지는 심각한 의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中共의 농촌은 생활상태가 낮을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빈약하다. 농지의 사용권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큰 격차가 발생하여 그것이 정책했을 때는 아마도 中共은 현재의 「농업의 자유화」정책을 전환하여 「萬元戶」를 탄압하고 그네들이 축적한 재산을 몰수한다는 강경한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 때에도 「농업의 자유화」정책은 소멸하고 또 다시 지난날의 「人民公社」와 같은 평등주의적인 농업정책이 표면화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지 모

른다. 그러한 시점에서는 中共의 농업정책은 다시 대폭으로 후퇴하고 증가하는 인구를 양육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충분이 있다.

사실 「萬元戶」의 사람들도 이러한 위구심을 언제나 갖고 있는듯 하다. 즉 「우리집의 봄」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역사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판단능력을 中共의 농민만큼 강하게 가지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또 농업의 자유화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쉽게 농민들이 정부의 방침에 호응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과감하게 뛰어 들지않는다는 풍조를 낳게 한다. 그것은 또 농업의 자유화 정책이 도달해야할 지점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농업의 자유화에 의한 증산효과에도 일정한 엄한 제동이 존재한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현실에는 「자유화」가 추진됨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다. 어느 때인가는 「농업의 자유화」정책도 그 한계점에 도달하여 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 시점에서는 동시에 「經濟의 自由化」정책도 전면적으로 정지되며 따라서 「門戶開放」정책도 그 역할을 다하고 형태는 달라져도 또다시 채국정책이 숨을 돌리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타이밍이다. 1997년의 香港의 주권반

환까지 이러한 정책의 전환이 있게 된다면 ·중공은 보다 엄한 정치적인 반동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점으로서 21세기초를 정책전환의 타이밍으로 고려해 두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 Ⅲ. 왜 「經濟計劃」은 안되는가

#### 低物價政策과 潛在的인플레이要因

「경제계획」의 최대포인트는 농산물, 공업제품의 그 주요한 부분을 국가가 가격을 정할뿐만 아니라 생산수량, 소비수량을 모두 개별의 지역, 기업마다 상세하게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생산, 유통이 규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로운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가격이 형성되고 그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생산, 소비가 정해지는 자유경제체제와는 큰 차이이다.

「계획경제」하에서는 모든 상품의 생산, 유통에 가장 강하게 영향하는 것은 경쟁에 의해 성립된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공정가격이다.

예로 급속히 공업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생산코스트에는 관계없이 공업화의 중점품목이 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 그것을 생산하는 국유기업에는 대폭적인 이익을 보장한다.

한편 경제체제의 발전에 꼭 필요한 상품 가령 석탄, 석유의 에너지가격을 국제가격과 전혀 관계없는 수준으로 묶어두고 에너지산업에 속하는 국영기업에는 생산코스트 판매가격과의 격차, 즉 적자를 국가재정을 통하여 계속 보전한다. 「계획경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상시 발생한다.

그것이 결과로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대한 경제적 자극을 약화시켜 에너지의 막대한 낭비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바 있다.

이와같은 예이기도 하나 식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쌀, 소맥분, 옥류등, 주요식료품의 가격을 농촌으로부터의 매입가격 즉 생산코스트를 반영한 원가를 훨씬 밑도는 낮은 수준에 묶어두어 이것으로 국민전체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은 소련에서 中共에서나 공통되고 있다.

이러한 식료품가격의 저수준 유지를 위해 국가재정은 막대한 가격보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것은 식료품의 낭비를 발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농민의 근로의욕을 대폭으로 억제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식료품 저가격제도를 철폐하고 생산코스트를 반영한 소비자 가격을 설정하려고 하면 당연히 식료품가격은 대폭으로 상승하고 공장노동자 등 대도시에서의 소비자 생활수준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러한 인위적인 저물가정책을 관철하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가재정의 적자를 발생시키는데 그것이 또 잠재적인 인플레이요인이 되어 경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한다. 중공도 그 예외는 아니다. 85년 7월 중공정부는 계속 증가하는 식료품에 대한 가격보급금을 삭감할 목적으로 전면적으로 식료품가격을 개정, 대폭으로 인상했다. 이 식료품가격의 인상부담을 얼마큼 격감하기 위해 공장노동자 등 도시주민에 대한 급여수준의 개정도 동시에 실시했으나 인플레이를 계속 억제하려고 하는 이상 급여인상의 폭은 식료품 가격의 인상 폭보다 적게 된다. 즉 그만큼 도시생활자의 생활수준은 실질적으로 절하된 것이다.

「계획경제」가 갖는 최대의 결함은 가격개정이 경쟁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시장의 동향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의한 행정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점에 있다. 자유로운 경쟁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수급밸런스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가격조정이 실시되어 그 누구도 가격변동을 정부의 책임으로 묻지 않는다.

그러나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는 제국에서는 정부가 모든 상품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만약 식료품과 같이 생활의 기본적 자재에 대폭적인 가격인상이 발생하면 곧 국민의 강한 불만을 사게 된다.

## 폴란드의 悲劇의 眞相

1980년에 시작된 폴란드의 재정위기도 실은 직접적인 방아쇠가 된 것은 육류등 식료품가격 인상의 정부결정에 일반 소비자의 강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공의 경우 정부에 의한 식료품의 통제가 격으로 판매되는 식료품과 함께 「自由市場」이 병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급밸런스의 변화에 따라 성립하는 시장가격이 기능하고 있다. 정부의 통제가격에 의한 식료품의 판매는 티켓제로 생산코스트를 훨씬 밑도는 저가격으로 억제되고 있는 한편 구입할 수 있는량은 티켓제에 의해 규제를 받고있어 어느 일정의 밸런스는 찾을 수 있다.

만약 배급제에 의한 쌀 식료품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고소득층이 있다면 그들은 통제가격보다도 3, 4배 비싸도 보다 좋은 품질의 식료품을 자유시장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이같은 상태가 소비자의 불평불만을 억제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식료품의 통제가격을 대폭으로 인상하여 자유가격에 접근시키면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소수자들로서는 별다른 타격은 없으나 저임금의 많은 소비자에게는 큰 타격이 된다.

이러한 식료품의 통제가격을 대폭으로 인상하여 생산코스트에 맞는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이러한 광범위한 소비자의 반발을 겁내는한 실행은 매우 어려우며 가령 실행했다고 해도 인상폭은 생산코스트와는 아무래도 맞지 않아 여전히 가격보급금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현실에는 식료품의 통제가격을 인상하는 동시에 식료품 이외의 다른 소비물자의 통제가격도 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격의 인상정책은, 곧 바로 잠재적인 인플레이를 유발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기 석탄, 석유, 전력등 에너지가격을 생산코스트인 국제시장에 맞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면 그것은 직각적으로 인플레이의 폭발을 가져오는 위험이 된다. 이때에 정부가 통화의 공급량을 극도로 억제하면 국영기업의 감량경영 합리화가 진행되는 것은 확실하나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를 발생케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계획경제」체제의 나라들은 공식적으로는 실업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실업자가 없는 이상 자유경제제국에서 볼 수 있는 실업자보험제도가 있을 수 없다. 실업자보험제도가 없는 「계획경제」의 나라에서도 만약 인플레이가 폭발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영기업의 감량경영, 합리화가 급속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갈 곳없이 생활수단을 빼앗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는데 이들은 정치불안을 발생시키는 원동력으로 전화한다. 1980년의 폴란드 위기도 바로 이러한 프로세스로 시작되었다.

## 中共經濟에 대한 特效藥은 있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계획경제」제국의 최대의 고민은 식료품, 공업원자재 에너지등 광범한 물가체제를 행정적인 수단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있다. 자유시장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고민은 정부로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된다. 오히려 경쟁의 격화를 통하여 기업의 자연도태가 생산코스트를 급속으로 낮추고 감량경영 합리화에의 노력을 자극하는 강점이 자유경제제국에는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가 경제활동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계획경제」제국에서는 가격체제의 변경 그 자체가 정치위기로 연결되는 위험으로, 언제나 살아 있는 것이다.

중공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평소생산코스트와 불균형을 이르고 있었던 석탄, 석유, 전력등 에너지가격의 개정만해도 오늘날까지 아직 손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위험이 즉 가격체제의 변경이 그대로 정치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요소를 중공의 지도부조차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코스트에 맞지 않는 낮은 수준에 통제가격을 묶어두는 그 자체는 다시 말해서 예로써 에너지에의 노력을 갖게하는 경제적 자극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며 에너지의 낭비를 더욱 크게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때, 거기에서 생기는 二津背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중공의 지도부가 안고 있는 극히 심각한 과제로 되

어 있다.

## Ⅳ. 中共經濟를 보는 要領

### 周期的인 「經濟調整」을 豫測할 수 있는가

중공의 경제활동을 접치는데는 경제기반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율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생기는 불균형 마찰현상을 어떻게 잡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80년대초에 비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첫째로 「國際信用」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를 안고있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중공정부가 취해야하는 균형회복수단이 심하게 제한되고 있으므로 그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공은 「농업의 자유화」의 성공에 의해 식량을 비롯하여 농산물의 공급이 늘어나고 경제발전을 저해해온 요소의 하나가 해소되는 한편으로는 인구의 8割이 되는 농촌에서의 빈부의 격차가 확대하여 새로운 불안정 요소로 되고 있다. 즉 종전과는 달리 농산물의 증산이 본격화한데서 생기는 여력을 어떻게 하여 유지하면서 경제전체의 합리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느냐 하는 점에 문제의 초점이 모여있다.

아마도 80년대 끝까지는 「농업의 자유화」 정책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나 농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 확대로 뒤흔어진 빈곤한 구룹의 강한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채 끝날지도 모른다.

오히려 큰 문제는 어떻게 하여 난제로 되어 있는 가격의 개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며 안정한 가격체제를 도입하느냐에 있다. 그리고 또 「門戶開放政策」의 진행과 함께 급증하는 소비재의 수입을 억제하면서 농촌에서 구매력을 축적해 가고 있는 「萬元化」에의 불만을 유도하지 않는 정도의 소비재의 공급 확보를 실현하느냐에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교통운수 그리고 에너지의 공급과 같은 경제기반의 충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경제계획당국」의 관리능력 혹은 집중적인 투자체제를 저해하는 지방주의 또는 「割拠主義」의 영향을 중앙정부가 결정적으로 억제할 수 없었던데서 생기고 있다. 아마도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제기반의 빈약과 경제성장의 모순이 모순대립을 발생시켜 주기적으로 「경제조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를 되풀이하는 외에 중공의 지도부로서는 달리 방법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중공을 큰 수출시장으로서 평가하는데는 이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경제조정」의 타이밍과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조정」도 어느 의미에서는 경제기반과 경제성장과의 사이에 발생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하나 그것도 어느 때처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점차로 곤란해지고 있다. 그것은 중공의 처지로서 국제환경의 변화로부터 강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중공의 지도부가 취하고 있었던 「경제의 자유화」 정책은 어쨌든 농업을 중심으로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아슬아슬한 밸런스 위에서 있으며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조정」을 주기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때마다 상당한 혼란이 경제운영에 발생한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 人民解放軍의 動向을 重視하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의 자유화정책을 지탱하는 사회적기반은 자유화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농촌에서의 「萬元戶」들이다. 그들은 농업생산의 주역이 될만한 기술수준과 함께 기민한 정세판단능력을 갖고 있어 자유화정책이 지속되는한 서둘러 벌 수 있는데까지 벌어 축적할 수 있는데까지 축적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계속 취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毛澤東사상에 연결되는 「평등주의」적인 발생에 서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그룹, 즉 강한 노동력을 갖지 않는 빈곤한 농가 혹은 육체적으

로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지금의 자유화정책 그 자체가 생활수준의 상대적인 저하와 사회적 위신의 후퇴로 연결되는 만큼 아마도 뿌리 깊은 강한 반감을 현정권에 대해 계속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文革時代를 좋아하는 그룹과 문혁시대의 중앙집권기분에서 해방되어 스스로 마음먹은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는 층과의 대립은 그대로 黨내에도 파급되어 문혁중에 모택동사상을 신봉하고 입당한 당원들은 자유화정책에 의해 「紅」보다 「專」이 중시되는 풍조속에서 그 총체적인 지위가 후퇴하는 현상에 강한 불만을 계속 가질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인민해방군 내부의 불만이다 원래 군대라는 것은 소비전문의 조직으로서 군사능력을 높일려고 한다면 생산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발전하는 고도의 군사기술을 이해하고 조작하기 위해 병영생활의 모든 것을 군사훈련에 도입할 수 밖에 없다. 인민해방군으로서는 더욱 더 간부의 지적수준 혹은 고도의 군사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되어 결국 문혁중에 입대하여 간부의 지위까지 승진한 「文革派」 간부들은 이번의 軍縮으로 거의 모두가 도태되어 어렵고도 엄한 사회생활속에서 스스로의 지위저하를 한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만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중공경제의 생산능력은 자유화정책에 의해 나름대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업생산의 향상은 현저하여 이는 자유화파의 큰 승리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경제기반의 확충강화에 필요한 자금, 노동력 자재를 과감하게 투입할 만큼의 중점적인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있는 현상에서는 높은 경제성장은 곧 약한 경제기반과 충돌하여 도저하서 마찰현상을 발생시키므로 밸런스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조정」을 이제부터라도 몇번이고 반복하면서 가파르기로 시간적 공간적인 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중공경제의 앞으로 걸어가야할 길인 것이다.

## 「文革派」는 主流派로 復活할 수 있는가

「萬元戶」가 자유화정책의 최대의 지지자라고 한다면 공업부문에서는 黨「書記」의 규범에서 벗어나 능력여하에 따라 과감한 합리화 그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수한 경영자도 자유화정책에 의해 큰 혜택을 받는 그룹에 속한다. 경직화된 모택동사상을 신봉하고 상급의 당지도자에 무조건으로 복종하는 것만으로 경제지식이나 경영능력을 갖지 않는 당서기들은 싫진말진 문혁시대를 동경하고 「문혁파」의 주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최대의 결함은 실무능력의 부족과 지적수준이 낮은 점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능력차에 의한 선별과 정도 공업에 한하지 않고 사회, 문화활동에 까지 미쳐가고 있다.

또한 문예에서도 영화, 텔레비전등등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으로부터는 능력이 있는 인간만이 특세를 하는 시대 이것이 「자유화」정책의 특징이며, 사상을 중시하는 「문혁파」의 발언력은 경제전체의 성장에 따라 점점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것 또한 필연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극히 아슬아슬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가파르기로 유지되고 있는 현상에 보다 강한 성장에의 자극을 주려고 한다면 경제적 합리성 즉 생산코스트에 맞는 가격체계를 조급히 결정하고 이에 의한 유통시장 그리고 또 省資源, 省에너지 省力化 라는 감량경영, 합리화에 결부될 수 있는 경제적 자극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가격체계의 개정에는 필연적으로 얼마만큼의 혼란이 따른다고 해도 그 혼란이 종식될 때에는 또 한번 새로운 경제성장이 탄생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때에 실은 경제기반과의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형태로 사전에 상층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중공의 지도부에 부과된 중대한 임무이다.

(다음호에 계속)